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특별세션 I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김주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2021 DMZ포럼(DMZ Forum 2021)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는 주제 아래 시작되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첫 특별세션(PS-I)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비핵화와 평화의 길을 모색해 왔던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며 논의하는 자리였다.

前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前 대북 특사를 지냈던 조셉윤(Joseph YUN)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 마사오 오키노기(Masao OKONOGI)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위샤오화(Shaohua YU)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루스키 미르 재단 국장이자 UN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등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온 5명의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패널로 참여하여 차례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5명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위한 4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한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군사적인 옵션만을 가지고 접근 및 해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일방적인 고강도 제재로 북한의 핵포기 문제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북한 정권 생존에 필수조건인가? 네 번째, 現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국가운영전략은 그의 선대였던 김정일과 같은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앞선 질문에 대하여 그 어떤 요건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결정적인 묘수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즉, 군사적인 옵션과 일방적인 제재는 오히려 교착을 일으켜왔으며,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도래했던 지난 20년 이후, 북한은 계속하여 생존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에게 핵무기는 생존에 있어 유용한 수단은 되지만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국가운영전략 노선이 지난 2018년 4월 군사중심에서 경제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이유를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즉 경제개방을 위한 제재 해제를 중요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초는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선 북한의 핵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이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공평한 주고받기, 즉 최소한의 상응되는 조치로서의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북핵 협상의 방향은 스냅백

(Snapback) 조치를 전제로 한 단계적·동시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동시적인 접근을 통해 신뢰가 약해져 있는 북미상황에서 양국의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단기간에 도출할 수 없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하였다. 그에 대한 핵심으로 기존 북핵논의에 대한 내용을 일괄 교환할 필요성이 있고 미준수 합의에 이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북한은 영변의 핵물질 생산시설 영구폐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영구폐기, 핵 및 ICBM 개발에 대한 동결에 대해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미국은 민수경제분야 제재 항목인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내용을 해제 및 북한에 대한 에너지 동력자원(석유) 지원을 통한 핵동결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평화연구소의 조셉 윤 선임고문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전통적인 대북 접근법을 언급하면서 이 접근법은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북한 비핵화 정책은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북한이 원하는 실용적인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셉윤 선임고문은 3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며, 3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구상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 종식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비핵화와 동등한 수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안은 군비 통제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단계적 진전이 더욱 용이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안은 現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양자방식에서 다자협상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다자협상의 방식을 통하여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등 4개국 당사자들의 진정한 헌신이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있어 앞선 대안들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게이오 대학교 마사오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북미교섭은 싱가포르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실무적인 교섭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앞으로의 북미관계를 전망할 때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3주년이 첫 관문이자 북미 접촉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 측은 공동성명의 명기된 원칙의 재확인을 요구,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에 대한 수립과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원칙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교섭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북한의 경제 제재 및 완화조치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난 9월 수상에 취임한 스가 요시데히 총리의 첫 국회 연설을 통해 '모든 납치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조치'가 일본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앞선 문제들이 타결이 될 경우, 북일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성을 전망하였다.

중국국제문제 연구소 위샤오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의 외교적인 교섭 안에서 중국의 위치를 언급하며, 최근 4년간의 북핵 문제의 기본경위를 이야기하였다. 우선적으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북미간의 상호불신, 남북관계의 취약성은 상호동력을 상실하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 통해 북한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사고는 근본적으로 공동안보라는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앞으로 한중 양국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력에 중요한 사고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에 대한 병행과 통합적인 추진에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UN 대북제재위원회 게오르기 톨로리야 위원은 시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문정인 좌장의 질

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국의 평화구상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게오르기 톨로리아 위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생각은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어 보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러우나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진행하는 실질적인 단계까지 나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북한을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장기적인 협상을 염두해두고 현재 교착되어있는 동북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 속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대북 압박협상이 아닌 통합과 관계 참여 속에서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덧붙여 북한은 전 세계 핵보유국들이 비핵화를 진행하면 북한 또한 비핵화를 진행하겠다는 기초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30년 전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율하고 제한해야 하며 기존 핵 보유국들과의 관계 참여를 통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문정인 좌장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의 답변이었다. 근본적인 질문이자 현재 북미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정인 좌장은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에게 북한이 이번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질문하였고,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대화속에서 애매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명시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북미간의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협상 자세의 기초를 취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며 상응하는 단계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때 북한이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 토론에 있어 첫 번째는 조셉윤 선임고문, 다음으로 마사오 오키노기 명예교수, 세 번째는 위샤오화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석 수석연구위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세션이 마무리 되었다.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특별세션 I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김건주 평화공공외교협력단

5월 21일 개최된 2021 DMZ 포럼(DMZ Forum 2021)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첫 세션(특별세션 I)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은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前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셉 윤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 마사오 오코노기 게이오 대학교 명예교수, 위샤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게오르기 톨로라야 UN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등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출신 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국가운영전략과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 미친 영향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성공적인 북핵 협상의 방향과 실천을 위한 보완적 기제를 발표했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스냅백(snapback)조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을 북핵 협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 내용은 비핵화 1단계에서 북측이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 발사대 영구 폐기, 핵/ICBM 개발 동결 조치할 경우 그 대가로 미국 측이 대북 에너지(석유)지원, UN 대북 제재 중 민수 경제 분야 제재 항목 해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았던 조셉 윤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은 대북 압박 정책의 한계를 고려해 북한이 원하는 실용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북한 체제 안정 보장 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조치 병행 노선(parallel path)안, 군비 통제 요소를 포함한 단계적 진전 협상안, 북미 당국간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신속한 정치관계 정상화, 북핵 협상 포맷을 북미간 양자방식에서 한국, 중국 및 제3국 포함 다자방식에서의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한일포럼 공동의장과 일본 방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마사오 오코노기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바이든 정권에서의 북미관계를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하에서 북일 경제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정권은 대북 정책을 미국의 세계전략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대북관계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과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원칙을 확인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레벨의 비핵화 교섭이 재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기초연설에서 '모든 납치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중요 과제로 뽑았던 것을 언급하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북미 비핵화 교섭이 타결된다면, 2002 북일평양선언의 내용처럼 북일 국교 정상화 후 경제협력에 일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위샤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북핵문제 기본 경위를 살펴보고 현재 상황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사고와 경로를 발표했다.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 북미 간의 상호 불신, 남북 관계의 취약성, 코로나 사태의 부정적 영향으로 현재 한반도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했으며, 중국은 근본적으로 공동안보의 사고에서 해결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은 병행, 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한 해결 경로가 중국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체현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루스키 미르재단 국장이자 아시아 지역 문제에 대한 수십 년 경력의 장관급 외교관인 게오르기 툴로라야 UN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은 지난 4년의 비핵화와 한국의 평화 구상에 대해 러시아의 관점을 발표했다. 현재 한반도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현실 또는 대치 중인 안정인 ‘뉴노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안으로 군비 통제와 제한을 꼽았다. 따라서 5대 핵보유국(P5)을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에 참여시키고, 군비 통제, 핵무기 제한 및 축소 프로세스는 ‘조건적, 호혜적, 상호적, 점진적 비핵화(CVID)’에 기반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다른 참여자들에게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셉 윤 고문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북한은 전세계 모든 핵보유국들의 비핵화를 전제조건하에 우리도 비핵화하겠다는 기준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기존 핵보유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통합과 관계 참여, 압박을 동시에 시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에서도 북미 갈등상황을 해결하기엔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게오르기 툴로라야 위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을 했는데,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제재 해제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UN 제재위원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 조치 해제 위해서는 북한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답했다. 작년 대북 경제 제재 조치 중에서도 북한은 사이버범죄, 불법 수출 등 조치를 위반하며 생존해왔기 때문에, 경제 제재 조치 해제보다 더 상징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은 상징적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샤오화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가급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도와주고 있는가, 방해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마사오 오키노기 교수는 ‘스가 총리는 CVID를 주장했는데, 일본이 제시하는 대북외교정책이 미국보다도 더 강경해보인다며, 북한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비핵화가 북일 협상이 아니라 북미협상이므로, 북미 협상의 결과에서 어느 정도 일본이 만족한 입장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현 상황이 진정되면 일본은 북일회담을 기대하지만, 남북 일본인의 인권을 위해서면 아무것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박은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정책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강경정책을 요구하고, 북한에게는 일본과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한국에겐 애매하다’는 지적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일본이 그렇게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일본 외교의 상황대응형 특징을 보였다. 이종석 위원은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조금 더 명시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면, 미국과 북한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협상이라 느끼고 김정은 위원장도 나올 것이라며, 애매모호하다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답했다. 또한 ‘한국과는 왜 북한이 대화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는 의미없다고 북한이 판단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자기 자립성을 못 갖고, 핵 문제에 묶이면서, 핵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 갈등 해소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 북한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답했다.

문정인 이사장은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통해 얻은 주요 통찰을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현실을 직시하여 현실적 접근, 유연성을 갖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이 유연하게 나와야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가 판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가 얼마나 창의력과 결단력을 갖고 나가느냐가 관건” 등 3가지로 정리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